

늘어나는 1~2인 가구, 조립식 주택이 딱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조립식 주택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늘어나는 1~2인 가구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주력했던 정부가 이번엔 조립식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한 것.

도시형 생활주택도 조립식으로 지을 경우 공사기간도 단축하고 비용도 장기적으로는 줄어 들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때 전·월세 이주자 주택 등에 조립식 주택이 활용될 수 있는 등 조립식 주택의 활용 범위가 넓다”며 “조립식 주택 활성화를 유

정부, 모듈형주택 활성화 지원

공사기간·비용 획기적 줄여
건물 해체해 재활용도 가능

도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 4일 내놓은 조립식 주택 건설 활성화 방안도 같은 맥이다.

조립식 주택을 지을 때 종전에 적용하던 성능 기준을 기존 10개

에서 다섯 개로 대폭 줄이고, 콘크리트만으로 지을 수 있도록 제한돼 있던 건설공법도 철골 공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기준을 추가한 게 개정안의 골자다.

정부는 조립식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한 건 지난 2010년 크루즈 선박에도 조립식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처럼 정부가 조립식 주택 건설 활성화에 나선 것은 조립식 주택이 가진 장점 때문이다.

무엇보다 건물이 조립된 형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허물 때도 조립만 해체해 재활용할 수 있어 자원 낭비가 거의 없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조립식 주택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택 리모델링에도 제격이다.

조봉호 아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조립식 건축 시스템이 신축 건축물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량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 받는 구조적 부담이 크지 않고 공사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립식 주택은 국토부가 분당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PC주택을 도입한 것이 시초

다. 현재까지 관련 시장이 큰 폭의 성장은 없었으나 기술 개발은 꾸준히 이뤄져 시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내놓은 ‘공업화 건축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도입된 국내 조립식 건축시장 규모는 지난해 현재 1000억원대다.

유일한 책임연구원은 “국내 조립식 주택시장은 2020년에 최소 9400억원에서 최대 3조4000억원의 시장으로 예측된다”며 “정부 역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edaily.co.kr